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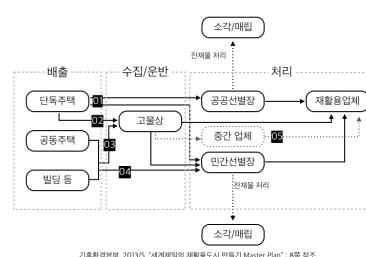
소준철¹⁾·서종건²⁾

○ 폐지수집 (여성)노인은 넝마주이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 도시는 “무엇보다 경제적 분업이 최고로 발달한 장소”다. 도시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욱더 분업에 결정적인 조건들을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에서의 삶은 생계를 위한 투쟁을 자연과의 투쟁으로부터 사람들을 둘러싼 투쟁으로 전환시킨다(짐멜, 2005: 49~50쪽).” 바로 이 지점에서 넝마주이 혹은 폐지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
- 2015년인 지금, 사람들이 더 이상 추령과 집계를 들지 않게 되었고, 이전과 같은 공동체가 사라졌다. 그러나 넝마주이가 하던 일, 즉 폐지를 줍거나 고물을 줍는 일마저도 사라진 건 아니다. 또 다른 개인들이 그 일을 이어서 하고 있고, 대개는 노인들이다.

○ 재활용 정책과 폐지수집 그리고 (여성)노인

- 서울시의 재활용 정책은 “배출-수집/운반(수거)-처리”의 3단계로 볼 수 있다.
- 수집/운반은 두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자체가 고용한 환경미화원이나 민간위탁업체에 의한 제도권의 영역과 주로 도보꾼과 나까마에 의해 고물상³⁾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제도권의 영역으로 말이다.
- 비제도적인 영역에서의 수집/운반은 ②와 ③에 해당한다. 허가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일종의 사각지대로써 암묵적인 용인(容認)에 의해 유지되는 상황이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폐지수집 행위는 여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②와 ③의 과정이 노인들에 의해 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나까마’라는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들은 재활용 자원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팔거나 노인들로부터 재활용 자원을 매입하여 고물상에 되팔기도 한다. 고



[그림 1] 재활용 자원의 흐름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학원 사회학전공 박사과정

2)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3) 우선 고물상의 지위를 젊고 넘어가겠다. 도심 내에 있는 고물상은 대개 불법인 상태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건축법」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분류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은수미 의원실, 2012: 14쪽 참조).

물상은 제도권의 민간선별장에 재활용 자원을 팔기도 하지만, ③처럼 선별장의 역할을 하는 (역시 비제도적인) 중간업체에 팔는 경우가 있다고도 한다.

○ 폐지수집 과정에서 폐지 가격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 노인들이 70~90원 정도에 종이를 가져다 팔면 고물상에서 얼마를 붙여 중간처리업체에 팔고, 또 중간처리업체가 에누리를 취하고 200원대 중반의 가격에 제지업체에 최종적으로 팔다. 노인들의 매입 가격은 단순하게 고물상의 잘못만은 아니며, 1) 근본적으로 이 가격이 국제지가에 연동되어 있으며, 2) 선별과정에서 중간유통을 겪으면서 일정한 돈이 깎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가격 결정의 구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수율의 문제인데, 선별과정에서 불량인 종이가 뒤섞이는 경우에 등급이 낮아진다. 이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이미 노인들이 가격에 있어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들이 종이 무게를 올리기 위해 물을 뿌리거나 비에 젖게 두는 행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서울시 여성노인 빈곤의 상황은 33.9%에 달하며, 70대 후반의 경우에 44.4%에 달한다.

- 『2014년 빈곤통계연보』(2015)는 노인들이 절대적 빈곤율이 49.1%이며, 중위 50%를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 빈곤율이 60.6%에 달한다.
- “현재 한국사회 여성노인의 빈곤은 교육기회와 소득수준의 세대 간 불평등, 생애기간내의 소득불평등이 누적되어온 총체적 결과”라는 지적⁴⁾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

[표1] 서울특별시 65세 이상 빈곤율

	평균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65~69	70~74	75~79	80~84
빈곤율	31.9	29.5	33.9	24.4	31.7	44.4	31.3
						30.3	

○ 마포구 아현동과 서대문구 충현동과 북아현동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

- 아현동의 경우 231가구 30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충현동은 234가구 403명, 북아현동의 경우 119가구 153명이 생활하고 있다. 총수급자는 각 자치구의 타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 노인 인구의 비율은 이 지역의 빈곤의 형태가 노인 빈곤의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표2] 연구 대상지역 인구, 노인인구 및 수급자 수

	전체인구			65세 이상 내국인					총수급자	
	계	남	여	계	남	여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가구	인원
아현동	25,700	12,481	13,219	2,907	1,206	1,701	15.1	94.7	231	306
충현동	19,650	9,597	10,053	2,916	1,221	1,695	20.2	165.4	234	434
북아현동	10,544	5,116	54.28	1,556	642	914	20.2	158.9	119	153

- 단순히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노인이 많다는 해석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연구

4) 장미혜 외, 2013: 10-13쪽.

월, 2014). 이는 곧 빈곤한 노인, 특히 빈곤한 여성 노인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역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을 지속해야 한다. 이는 곧 여성 노인들을 포함한 노인들이 폐지 수집과 같은 노동으로 향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 “가급적이면 새로운 분으로”

- 표면적으로 이들과 같은 노인들을 위한 서울시의 사회복지 정책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큰 틀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저소득 노인 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제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표3] 서울특별시의 노인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분류

서울시 노인복지정책	대분류	소분류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외 4가지
	저소득노인지원서비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 무료양로시설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보육제도 외 3가지
	일자리지원사업	공공일자리, 시니어 클럽

- 그러나 현실은 뉘록하지 않다. “이 어르신은 올해 받았으면 내후년에,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복지 정책의 불충분함이다. 대상자가 아니어서, 또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도 노인들은 복지 정책에서 소외된다.

○ 아현지역⁵⁾(폐지수집 노인들을 기준으로) 총 13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 1-4 지역: 폐지수집 여성노인 주거 지역
- 5-6 지역: 다세대 주택 및 단독 주택 밀집 지역
- 7-9 지역: 재개발 지역
- ■ 지역: ■아현동 가구 거리, ■북아현동-충현동 상업지구 일대, ■아현시장 일대, ■아현역 상업지구 일대



○ 그녀들은 “한들이 아니야, 쉬질 않아”

- 각 지역의 상인들에게 문의한 결과, 노인들, 특히 여성노인들이 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오간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관찰한 결과에 의해서도 여성노인의 경우 노동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짐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특히,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새벽 시간을 비롯한 시간의 안전 문제가 야기된다.

5) 지형도 <http://dmaps.kr/shgb>

○ 그녀들의 생활

- 사례 A> 상권의 변화로 인한 기존 상권의 몰락
- 사례 B> 특이한 노인: 운반 방식의 문제
- 사례 C> 새벽거리를 걷는 노인: 안전의 문제
- 사례 D> 보관의 문제
- 사례 E/F> 재활용정거장의 문제
- 사례 G> 재활용 자원 수거망과 문전 수거 방식의 문제
- 사례 H> 판매의 문제

○ 정책 제언

1.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실태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 :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에게 급히 필요한 것들은 (1) 이동 상의 안전 강화, (2) 공동 수거집단의 구축, (3) 재활용 자원의 보관의 안전성 확보, (4) 판매 시 유동적인 가격의 문제, (5) 건강의 문제, (6) 일자리 정책의 필요, (7) 건강의 관리 등으로 볼 수 있다.
2. 폐지수집 여성노인을 제도권으로 포섭해야 한다: 재활용 정거장의 거점화
 - : a. 재활용 정거장의 관리인 제도는 유효하지만, 조정이 필요하다. 관리인을 폐지수집 노인이 아니라 지역 자치회 등을 통해 운영하며, 폐지수집노인을 정거장에 등록하는 방안을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재활용 정거장을 현행 재활용센터처럼 일종의 거래 개념이 포함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⁶⁾
 - b. 고물상과 재활용정거장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경쟁 혹은 소거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의 조정을 통해서 (비등록) 고물상을 재활용 정거장의 중간 기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 c. 자원보상금 제도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정책이 쉽지 않겠지만, 노인 복지제도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공적기금 조성 등을 통해 분명히 준비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 정거장의 관리인에게만 주어지는 보상금이어서는 안 된다.⁷⁾
3. 성차를 고려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 정책)의 수립
 - : 성차를 고려하는 것은 단순히 돌봄 노동의 완전 사회화와 같은 기존의 방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 노인의 성차에 담긴 교육 수준 차이 등 인적·시대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6) 재활용 정거장을 폐지수집 노인이 관리인으로써 관리하는 것은 적절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인이 항상 상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사실상 비극이 예정된 공유지(共有地)로 보여진다.

7) 폐지 가격의 문제는 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활용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8) 지역형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성차를 고려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전문성을 전승하는 데서 면추어서는 안된다. 빈곤 여성 노인이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가지 예로, 부식(副食) 가게와 같은 마을의 상업 공간에서 여성 노인의 일자리 지원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